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6. 07. 15.

I. 상반기 주요 성과

1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반 마련

□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 * ①(신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개편, 주가조작에 대한 한도없는 신고포상금 도입 등
- ②(주주가치) 자사주 소각 처분·공시 강화 등 개정 상법의 안착 지원
- ③(혁신) 동전주 등 부실기업 퇴출, 맞춤형 기특상장 확대 등 다산다사 시장구조로 개편
- ④(국내·외 시장접근성 제고) 토큰증권(STO) 제도화, 영문공시 확대 등

□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

- * ①'26년 중(~7.3일) 코스피 상승률 +91.9% (지수상승률 세계 1위)
- ②시가총액 규모 세계 13위 → 7위권으로 상승
- ③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도 주요국 수준 상승 (韓 306, 日 207, 獨 1.94, 대만 5.99 (7.3일))

○ 배당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기업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

- * 현금배당액(조원) : ('23) 43.3 → ('24) 47.9 → ('25) 56.0(전년비 17.0%↑)
- 자사주 소각(조원) : ('23) 4.8 → ('24) 13.9 → ('25) 21.4 → ('26.1~5월) 43.1(전년비 101.4%↑)

< 주요 우수사례 >

▶ 합동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원칙을 확립하고, 시장신뢰 회복

- ☞ 거래소 감시망을 통해 포착한 대규모 주가조작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이 'One Team'으로 움직여 압수수색, 지급정지 등으로 추가범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검찰 고발 (※ 슈퍼리치들의 시세조종, 언론인 선행매매,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적발 및 조치 완료)

▶ A그룹, 자회사 중복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를 위한 자발적 노력(일반주주를 위한 배당, 이사회의 주주영향평가, 임시주총 개최) 수행

2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 국민성장펀드 출범 6개월만에 14.6조원(21건)을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 [투자방식] (직접투자) 2.5조원 (간접투자) 1.2조원 (인프라) 6.9조원 (저리대출) 4조원 등
- [지원분야] (AI·반도체) 4조원 (바이오) 0.9조원 (이차전자) 0.6조원 (방산) 0.5조원 등

○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26.5월)

- * 1차 출시분(6천억원) 5영업일만에 완판 → 3분기중 2차 펀드(6천억원) 출시 예정

□ '26년중 금융권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규모는 150조원('26.5말 기준, 진도율 60%)

- * 향후 5년간 약 1,250조원(민간 624조원+정책 626조원) 공급 예정

○ 기업대출 및 직·간접 투자 잔고 규모·비중 증가 등 금융권 자금흐름 변화

- * 5대 지주 및 산·기은 기업대출(전체대출가계+기업 중 비중)·투자(대출투자 합계 대비 비중) 잔고 추이 :
[기업대출] ('25.6월)1,317조원(60.9%) → ('26.5월)1,382조원(61.5%) [+65조원, +0.6%p]
[직·간접 투자] ('25.6월)426조원(16.5%) → ('26.5월)490조원(17.9%) [+64조원, +1.4%p]

-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역량 내재화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및 KPI 반영

< 주요 우수사례 >

- ▶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계·사업부처·지방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 이를 토대로 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실제 지원사례로 연결
 - ☞ 과기부(K-엔비디아, 퓨리오사 방문)·산업부(MAX 얼라이언스)·중기부(모태펀드 이어달리기) 합동간담회 및 1박2일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의 언어’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의 언어’로 소통
 - ☞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AI·반도체(리벨리온·퓨리오사 등), 바이오(혁신적 신약플랫폼), 방산(수출수주 확대 대응) 등의 기업을 발굴하고, 첨단산업 혁신 주도 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모험자본 공급
- ▶ 5대 금융지주 자체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역 인프라 사업 등 중심 대규모 직간접 투자 추진
 - ☞ (KB) 지역인프라 0.9조원 (신한) 모빌리티 산업 0.9조원 (하나) 방산 수출 0.2조원 (우리) 지역 인프라 0.5조원, 지역학교 AI인프라 개선 0.3조원 (농협) 디지털·에너지인프라 0.5조원

3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상환능력 상실한 장기연체채권 과감·신속 정리

- * ①새도약기금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10.4조원(88.5만명) 매입 → 즉시 추심중단
- ②사회취약계층 등 2.3조원(26.9만명) 심사없이 우선소각

○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관행 근본적 개선*

- * ①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26.2월) : ❶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내부기준 구체화 등), ❷매각 규율 강화(매도 후 불법추심 점검 등), ❸소멸시효 연장관행 개선(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 ②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26.5월) : 부적격업체 퇴출, 장기·과잉추심 관행 방지 등

□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공급확대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 * ①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상품의 금리를 ‘한 자릿대’로 인하(‘26.1월)
- ②청년의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리 4.5% 500만원 출시(‘26.3월)
- † ‘26.6월 2주 기준 95억원 공급(연간 목표 300억원) → [사례] 대학원 졸업 청년(99년생), “미래 상환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어 알바 병행 없이 단기간에 취업준비에 집중”

○ 국가가 책임지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 * ①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행(‘26.3월~) → 불법추심 2,119건 중단, 무효확인서 356건 발급
- ②변종사채(상품권 사채)도 피해구제수사착수,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143건 차단(‘26.5~6월)

< 주요 우수사례 >

- ▶ 개인 연체채권 관리 해외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우수사례를 국내 제도에 충실히 반영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발표(‘26.2월)]
 - ☞ [美] 채권매각시 원채권자 책임 규정 → [韓] 채권매각 후 양도인이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보고할 의무
 - [英] 채권자의 채무조정 先제안 의무 → [韓] 기한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 별도 안내 의무화
 - [獨]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불인정 → [韓]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 ▶ 5대 금융지주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효 도래 전 채권포기 등 소각 실적 대폭 증가(‘26.1)
 - ☞ 소각실적 : [‘25.上] 4,073억원 → [‘25.下] 4,708억원 → [‘26.上] 15,211억원 → [‘26.下^{계획}] 11,354억원
 - 시효완성 : [‘25.上] 2,062억원 → [‘25.下] 2,358억원 → [‘26.上] 2,220억원 → [‘26.下^{계획}] 3,650억원
 - 채권포기 : [‘25.上] 2,011억원 → [‘25.下] 2,350억원 → [‘26.上] 12,991억원 → [‘26.下^{계획}] 7,704억원

II. 핵심 추진과제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
- ✓ 변화의 가속화 · 제도화 · 항구화
- ✓ 현장+체감+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

①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글로벌 투자전쟁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선도	• 국민성장펀드 200조원 규모 레벨-업 •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로 장기·대규모 금융지원 • AI 시대 에너지 대전환 금융지원 확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 정책금융: 5극3특 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목표 확대 • 민간금융: 지방공급 인센티브 강화 •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Global Best 자본시장	• 증시의 균형적 성장 위한 시장 체질개선 • 자본시장 불합리↓·편의↑ 체감형 혁신 추진 •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등 장기투자 여건 조성

②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포용금융시스템 제도화·항구화	•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기반 제도화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구제 위한 법적장치 마련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범죄예방	• 연체채권 관련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채무자 지원제도 접근성 강화 •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및 창업전용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상황별 자금지원 및 관광소비 활성화

③ 시장안정 · 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정질서 확립	• 가계부채 엄격한 총량관리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 • 불법 금융거래, 금융사기 등 대응역량 강화
넓은 관행혁신 및 디지털·AX 혁신	• 금융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행정쇄신방안 마련 • AI 등 신기술 활용 체감형 금융서비스 구현 • 디지털 보안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안전한 활용

1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1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

□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레벨-업^[국정46]

- ①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투자수요 증가에 맞추어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조원에서 40조원(5년 200조원)으로 상향('27년~)
- ② 지원대상(現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
*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백신, 로봇, 미래형 운송수단, 방산, 이차전지, 수소, 핵심광물, 콘텐츠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DC, 퍼지컬 AI)에 장기·성장자본 공급
- ③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확대(年 3조원 → 5조원 이상, '27년~)
- ④ 외형 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췌, 사후관리췌 등 신설(9월)

□ 첨단기술·지식 기반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장기·대규모 금융지원

- ① 미래선도 원천기술 R&D,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기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
* 정책금융기관·민간 금융사 등이 공동설립하여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최대 10조원 공급 추진
- ② 기술평가·지식재산(IP) 기반 기술금융 활성화로 첨단기술 육성
* ①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 공급 위한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출시(8,800억원)
②인터넷은행·지방은행·신보 협업 통해 IP보증·대출 취급기관 확대
③국민성장펀드 초장기 기술투자 대상에 IP가치평가 반영

□ 저탄소 공정전환·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의 탈탄소 개편 지원^[국정46]

- 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전력) 인프라 구축 및 K-GX 지원을 위해 기후금융 규모 추가확대 추진(現 10년간 790조원, '26.2월 발표)
- ②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전환금융 본격 공급),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보증요율·비율 등 우대) 제공 등 산업 전반의 탄소감축 유도
- ③ ESG 공시를 법정 공시로 본격 도입*('26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하여 상장사의 기후·에너지 위기관리 역량 제고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 '29년 5조원 (→ '30년 2조원 확대 추진)

②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 (정책금융) 지방 주력산업 및 5극 3특 전략을 정책금융이 든든히 뒷받침

① 5극 3특 미래전략산업에 ①국민성장펀드 및 ②지방금융 공급규모 확대

- * ①운용규모 확대에 맞춰 지역 투입규모(40%) 확대(年 12→16조원), 지역전용펀드 5년 1조원 신설
- ②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상향 : 4개사 '25년 100조원(40%) → 6개사 '28년 164조원(45%)

② 지역 기업·산업을 우대하는 정책금융상품 추가신설 등 지속 확대

- * ①지역대표 전략산업에 대한 '성장엔진 우대보증' 신설(신보, 1조원)
- ②지자체은행 출연을 통해 지자체 추천 지역기업에 자금 공급(5극 3특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 대상)

③ 지역 현장방문을 지속 확대하여 지방 기업들의 애로사항 신속 해소

- * (예)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금융 同行」 권역별 가칭(매분기) 등

□ (민간금융) 지방금융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금융 인프라 확충

①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 시행

- * ①카드 등 다양한 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추진(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
- ②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 비금융 서비스(헬스케어 등) 복합지원 실시
- ③은행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시행

② 금융회사의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인센티브 제공

- * ①(지방은행) 지방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뱅 공동대출 실시
- ②(저축은행) 지방차주 추가 대출한도 부여 ③(상호금융) 지방대출실적 경영실태 평가 반영

③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 공급 및 지방 중소기업·서민대출 확대 유도

- * 평가방식 개선(상대평가 확대) 등 변별력 제고, 경영실태평가 반영비중 대폭 확대 등

④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면책 근거 마련, 생산적 금융 Fact Book(지방금융 실적 포함) 발간으로 성과에 대한 시장평가 강화(12월)

□ (민관협력)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창업·보육 플랫폼 추가 개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디캠프) 現 18개소 운영중 → '26.7월 광주, '26.下 대구 전주, '28년 천안 신설

②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신보·기은, 8월)하여 신용도·사업성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대상 정책금융 이용 교두보 제공 [국정46]

③ 지역·중소협력사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및 사회투자 활성화 [국정46:81]

- * ①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연계한 상생방안(특례보증 출연, 협력업체 컨설팅 등) 체계화(9월)
- ②금융회사 출자로 임팩트 투자 목적의 사회투자펀드 조성('26.4Q~, 3년간 모펀드 1500억원)

③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

□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시장 체질개선

① 상대적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국정47]

- * ①(진입)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폭 확대(‘26.下 3개분야 추가))
- ②(퇴출)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동전주·시가총액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 7.1일 시행)
- ③(세그먼트 분리)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27.1월 시행)

② 코리아 프리미엄 워크[3주간(9.28~10.16일)],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IR* 등 한국시장의 매력 홍보 및 글로벌 자금·기업유치 노력 추진

- * 최근 대기업 등이 코스닥 상장 의사 타진(1개사 KRX 직접 문의·10여개사 상장검토 진행중)

□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편의는 높이는 체감형 혁신 추진

① 개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엄정 대응^[국정47, 국가정상화]

- * ①조사공무원 통신자료 요청권한 부여 등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자본법 개정, 26.下)
- ②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까지 투자원금 몰수 대상 확대(자본법 개정, 26.下)
- ③허위사실 유포·과장공시 등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핀플루언서 등의 불법행위 차단(12월)

②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 마련(10월내)

- * ‘27년중(잠정) T+1 전환을 위해 외환·자본 시스템 제도 전면정비, 외국인투자자 협조 유도 등 추진

③ 국민이 투자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관행 개선(‘26.下 방안 마련)

- * ①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 추진
- ②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검토(현재 증권사 제공 이자율 : 연 9% 내외)
- ③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자본법 개정)

□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등 장기투자 여건 조성^[국정47]

①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위한 低PBR 기업 공표* 제도 시행(11월)

- * 업종별 PBR 일정기준 하회 기업 명단공표, 태그부착 및 가치제고 유도

②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추진(7월~)

- *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 부과, 주주동의 등 중복상장 특례 심사기준 도입

③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및 주주 제안·의결권 행사 여건 조성

- * ①기업이 유연하게 배당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도입(자본법 개정, ‘27.上)
- ②기업이 주주제안 가능시기(주총 6주전) 전에 배당결정 공시를 하도록 유도
- ③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4분기 오픈)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행사 지원

2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1 포용금융의 제도화·향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개혁^[금융개혁]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 재설계

* 현장 대토론회 실시(6.17일) : 현장·재야전문가 등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의견 청취

1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한 ①종합평가체계 및 ②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추진

* ①'26년 은행권 → '27년 초업권 ②포용금융 전략·내부통제 등 총괄 담당임원(CIFO)

2 과거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국가정상화]

* (예) ①대안신용평가 활성화 ②연체이력 활용기간 단축 ③신용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등

3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완화·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상품* 확대

* ①새희망홀씨 2조원 증액(~'28년), 인뱅 중저신용자목표비중 35%로 상향(~'28년)과 함께 저축은행-은행 협업형 중저신용자 특화 프로그램 추가 출시

②'26년 중금리대출 319조원(사잇돌 대출 3.6조원 + 민간중금리 28.3조원, +1.1조원) 공급 목표

③신용도와 무관한 단일금리(4.9%) 상품 출시^{기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우리} 등

4 건전성 규제 합리화, 임직원 면책 등 규제·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포용금융을 적극 뒷받침

5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책금융, 은행권 등의 자금지원 확대

* [보증^{신복}] ('25년)2,500억원 → ('30년)3,500억원 [대출^{은행}] ('23~'25년)3.6조원 → ('26~'28년)4.3조원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국정59]

1 정책서민금융 재원 안정과 탄력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 「서민금융법」 개정 → 유연·신속한 상품 신설 및 공급 확대[†](기존 예산 30% 내) 가능
† ①햇살론 특례보증 이자페이백(12.5%→6.3%), ②햇살론 유스 공급확대 추진

2 복지 연계와 제도권 금융 진입 경로를 강화한 대출상품* 신설 추진

* 대면심사를 통해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 공급

† ①연체정보로 위기징후 탐지→복지 연계, ②소액(月 1만원) 성실상환→제도권 금융 연계

3 민간 기부금(5대 금융지주, 기업계 미소재단 등) 활용, 미소금융재단별 특화상품* 개발

* (예) ①신한 미소재단 : 청년미래이음대출 성실상환자에 원리금 상환액 페이백('26.10월~, 최대 300만원)
②KB 미소재단 : 청년배달플랫폼종사자 배달용이륜차 구입대금 대출(최대 500만원 2.5% 금리)

□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의 권익 보호·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 ①고령층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지연 및 지정인 통지제도 도입

②소액 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강화

③민관합동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운영 → 소비자 관점의 금융정책 수립·평가

②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범죄예방 체계 구축^[금융개혁, 국가정상화]

□ 연체채권 관련 채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①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이 금융현장에 안착하도록 후속조치 추진

* 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26.上 실적부터 공시), ② 반복적 매각 제한을 위한 감독규정 정비, ③ 시효완성 조건부 대손인정 도입(9월), 공시송달특례 폐지(법무부, 연내 소촉법 개정) 등

② 상록수 등 유동화 SPC(1조원, 11만명)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전수 조사 후 새도약기금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6월~)^[국정59, 국가정상화]

③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도록 금융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7월)

* 20년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5년 시효완성(채무종결) 등

④ 부실채권(NPL) 시장 점검 및 매입추심업 규율 강화('26.下)

* 유동화전문회사(SPC),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등 점검 및 규율 방안 마련

□ 기관간 연계 및 절차 간소화로 채무자 지원제도의 접근성 제고

① 신복위가 원스톱 채무자 구제·지원을 위한 종합창구기능* 수행

* 채무조정(금융사,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

② 취약·서민계층 금융·복지·고용 연계 복합지원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 민관 협업으로 복합지원공동센터 개소 및 특화 금융상품(적금·대출·보험) 제공

③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무자의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금융 기관에 흩어진 부채증명서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약 89.1~95.7% 감소 예상(총 87.4~218.5억 → 9.5억원(연간))

□ 민생침해범죄 및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국가정상화]

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 (대응) 금감원 불사금 특사경 신설, 범죄수익 추적동결, 온라인 대부광고 파파라치 도입 등 (구제) 피해자가 신복위 방문없이 '원스톱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개시(10월), 수사-피해구제 연계 위해 '공공 고소대리인'(신복위) 지정(8월~)

② AI 활용 탐지·정보 공유(ASAP)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신종피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즉시 계좌정지 등)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도입 추진

③ 민생침해범죄(마약·도박·고액사기 등) 의심계좌 일반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화를 통해 범죄세력의 자금편취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재산 보호

* ① 특금법을 활용하여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 선제적 거래정지 시행(6.30일~)
② 그 외 중대민생범죄 일반에 대해서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거래정지 제도화('26.下)

③ 청년 및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확대

□ 청년의 경제활동 진출 과정에서 안정적인 금융생활 영위 지원

① 청년의 창업·성장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적극 공급

- * ①신보기는 협업으로 금리·보증료 모두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신설(8월, 2천억원)
- ②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유망창업기업보증, 희망드림보증 등) 확대(26년 2.2조원, 전년 比 +0.1조원)

② 청년·외국인 등 금융이력 부족자도 포용하는 신용카드 발급체계 도입(12월)

- * ①카드발급시 대안신용평가 적극 활용 ②금융이력 확인 곤란시 보증금 담보 신용카드 허용 등

□ 청년층 맞춤형 금융상품·교육 제공으로 자산형성 적극 지원^[국정82]

①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초기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방안 마련(12월)

② 청년 지원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중장기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방안 마련

- * (예)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26.7월 시행)' 이수시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0.2%p) 적용 등

③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6천억원, 9월) 서민 배정비중 확대(20% → 50%)

④ 청년의 개별 재무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1:1 재무상담 시행*(7월)

- * 연내 200개소 이상의 금융기관 상담지점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상담사 119명 위촉운영

⑤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내실화* → ①빚투·도박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②복무기간 중 자산형성 및 ③전역 후 경제적 자립 준비 지원

- * 찾아가는 재무상담소 운영(1:1 재무상담), 숏폼 영상, 예능형 콘텐츠(예 : 국방TV 군테크 통장방어사령부 등) 등을 활용한 장병 친화적 금융교육 실시 등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별 자금수요 및 관광객 소비 지역상권 확산 지원^[국정59]

①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매출, 업종 등 활용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모형) 은행권 대출 시범적용(당초 7개 → 16개 은행으로 확대, 2조원)(8월)

② 소상공인 경영 상황별 금융지원상품 확대·보강*

- * ①'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개편(10.5→12조원 +1.5조원 이상)
- ②은행권의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창업-경영-금융-폐업 등) 자체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③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을 연장(~'27년)하고, 보다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지원 대상·수준 등 정비(12월)

④ 하청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신속·안전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9월)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정산만기 단축(90→60일), 원청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 등

⑤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이용편의* 제고를 통한 골목상권 유입 촉진

-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現 100만원) 상향, 환전없이 결제 가능한 국가간 QR 결제서비스 확대

①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화 노력 지속 [국정56]

*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보다 강화된 1.5% 부여

① DSR 산정시 소득심사 강화(예: 성과급 반영비율 조정 등) 등 상환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하여 건전한 여신관행 정립

②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 축소

* 고위험(예: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다주택자 등) 주담대 추가 자본적립 등

③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구입수요 차단*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국가정상화]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既 시행),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단, 무주택자 제외), 탈법·편법적 대출행위 상시 점검 등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견고한 시장안정 유지

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 확대방안 사전 준비
② 소상공인 우대자금(희망드림 대출 1.5~30조원, 중신용자 금리인하(최대 5.2%p ↓) 등 금융부담 경감
③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전환 유도

②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중동전쟁 민생·실물경제 지원 프로그램(정책 259조원 민간 50조원+α 등)을 통해 고환율 피해까지 적극 지원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강화

④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신속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 제도 개선(12월)

* ①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청상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 자금지원
②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부실(우려) 금융회사를 신속(예: 3~4일내) 정리

□ 불법 금융거래, 금융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대응역량 강화

① 보험사기 방지인프라(신용정보원) 전면 확충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9월~)

* 보험사기 혐의정보(예: 공모자) 집중·공유 활용 확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등

※ 마운자로 주사제(25.12월), 요양기관 폐야백(26.6월) 등 실손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6개월간 집중조사 추진

②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하여 불법 금융거래 원천 차단

* ① FIU 심사인력 확충,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역량 강화
②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사무사 등) AML규율 강화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③ FIU-금융회사-검사수탁기관-법집행기관간 의심거래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 운영

②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금융개혁]

□ 과거를 답습하는 금융권(금융회사·공공부문)의 낡은 관행 혁파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제고(7월)

*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연임절차 개선,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 상호금융권 임원 자격요건 강화,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 추진(신협법 개정)

② 금융감독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행정·감독 쇄신방안 마련(9월)

* 사전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검사결과 공표 금지, 금융회사 자율시정 활성화, 제재 기준 합리화·구체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검사·제재·인허가 전반 개선 등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

①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 마련(연내)^[국정48]

* (주요내용) ①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②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③이용자 보호 강화 등

-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 대응하여 AML 규율 강화

② 대안신용평가,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등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포용 금융 서비스 출시 유도 (‘기획형 샌드박스’로 추진)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보안체계 확립

① 금융권 AX·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12월)

* ‘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금융사의 내·외부망을 단절하는 규제 도입(‘13.12월)

② 디지털 금융환경(AI·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

① 맞춤형 포용 금융 서비스 제공 등 효과적 데이터 활용·분석을 위해 개별적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②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 결합·활용 과정에서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결합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정보관리 방안도 마련

③ 정책 수요 사전 예측을 위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 확대

* (예) ①신보 기업분석솔루션(BASA)의 기업데이터 허브화를 통해 先진단+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②공공기관신정원건보 등 보유 정보를 결합하여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안신용평가 활용 등